

지 정 토 론

◆ 박 현 채 (서울제5중재부 중재위원)

주제 발표 논문에 나와 있듯이 미국은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보도를 둘러싸고 군과 언론이 갈등을 빚어왔고 양 집단의 여망을 수용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현대에 들어 6.25전쟁을 제외하고는 전쟁 당사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우리 언론과 정부에게는 미국의 다양한 시도가 참고해야 할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군과 언론은 그 특성상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됩니다. 둘 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군은 기밀보호, 즉 안보라는 측면을 중시하는 반면에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개주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생적으로 국가이익과 진실보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숙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나 고도의 국가안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가이익과 진실보도 문제가 충돌하게 될 경우 우선순위와 한계를 규정짓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국익이란 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명확하게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단순히 국익 신장을 위해 발발했느냐, 아니면 자유와 민주정의를 위해 발발했느냐에 따라 언론의 전쟁 보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 당사국인지 아니면 제3국인지 등, 해당 국가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는 더욱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모두가 국익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불가침이라거나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 통설로 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5년 5월 21일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Daily mail)은 ‘포탄의 비극’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의 요지는 “영

국군이 사용하는 포탄에 불발탄이 많아서 독일군에게 밀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진실을 담고 있었으나 다른 언론사들은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영국군 지휘부는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왜곡보도”라며 기사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군 당국의 해명성 발표에 접한 국민들은 데일리 메일이 이적행위를 했다면서 불매운동과 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50세였던 노스클리프(Northcliff) 데일리 메일 사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불리한 전황에 대한 진실보도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 신문보도가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들의 요구로 새 연립내각이 들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훗날, 패전한 독일 황제는 “우리는 데일리 메일 때문에 패했다. 진실을 알리는 펜의 힘,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진실 보도가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고 이 보도는 언론의 책임과 사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본연의 사명과 함께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한다는 상업적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자간 경쟁이 치열하고 특종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도처에 특종감이 널려 있는 전쟁만큼 미디어에 호재는 없다 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 전쟁을 실시간으로 관람하는 시대입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 때는 취재에서 보도까지 48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로 전황의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더 리얼하게 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언론을 선정주의에 빠져들게 해 국익을 해칠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 위원의 논문에서 거론됐듯이 언론의 선정주의는 적에 의해 심리전으로 역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모든 외신기자를 추방하면서도 유일하게 CNN기자만 잔류시킴으로써 다국적군에 의한 바그다드 지하 대피호 폭파와 무차별 공습, 오폭 등을 그대로 방송하게 하여 반전여론을 유도했습니다. 전쟁의 명분이 타당하더라도 전쟁으로 불가피하게 사상자가 발

생한다는 것은 반전론자나 평화론자에게는 커다란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결여된 보도와 지나치게 선정적인 과장·왜곡보도가 얼마만큼 국익에 해를 끼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방해가 되는지를 언론인 스스로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언론은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많은 국민이 갈등하고 있을 때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실에 대한 왜곡 없이 진실만을 보도해야만 제 기능을 다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군도 안보위기가 발생한 작전현장 등에 대한 취재보도진의 과도한 통제와 뒤늦은 사실 확인 및 해명이 불신과 추측보도를 유발해 비판과 오보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미디어는 전쟁 뉴스를 보도하는 수단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미디어는 무기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쟁 수행기간 내내 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최고의 무기는 여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여론지지 마저 없을 경우 제아무리 강한 경제력과 우수한 무기체제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무기인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군이 공감대를 형성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아가야 합니다. 군과 언론 중에 누가 국익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국민에게 맡기고 상대 집단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송 종 길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주제 발표 논문은 미국의 전쟁보도 시스템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설득력 있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언론학자로서 많은 것을 배움과 동시에 우리의 현실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의 차이점

미국은 지난 1차 대전 이후 세계전쟁을 주도해왔습니다만 모든 전쟁터가 미국과는 4,000~8,0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한국, 베트남, 이라크, 코소보 등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혹상을 실제로 일반 국민들은 접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어림짐작할 뿐이었지요. 그래서 미 백악관과 군 당국은 때로는 언론을 통제하고,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언론보도를 유도하는 등의 정책을 혼용해왔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에는 임베딩 시스템을 도입하고, CNN을 통해 전쟁의 상황을 스포츠중계처럼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베딩 시스템은 말 그대로 군 당국이 허락한 지역만을 취재하는 제한된 취재영역 내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 지적하듯, 실상은 군 당국은 언론의 전쟁터 접근을 조금씩 봉쇄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북한과 영토를 맞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1953년 6.25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는 긴장 속에서 여러 번 준전시상황을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험했던 국가위기상황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쟁보도를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맞비교하는 것은 커다란 온도차가 있습니다. 가령 연평도나 백령도 등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나면 한반도 전체에 전운이 감돕니다. 관련지역 거주민은 물론이고 서울과 경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들 긴장 속에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 추측과 언론보도에 귀와 눈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및 경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론은, 또 언론인들은 만약의 위기상황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가 더욱 값진 의미를 가질 듯합니다.

한국기자들의 전쟁취재 및 보도관행

베트남전쟁 이후 한국은 그동안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대부분 미국과 영국의 전쟁을 지켜보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지원대를 파견하기도 했으나 그 숫자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한국군 자체가 교전지역에서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에 국내의 관심도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실상입니다. 그렇기에 언론사에서 전쟁지역에 기자를 파견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생색내기 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제부나 사회부 등에서 파견된 젊은 기자들은 해당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 없이 급하게 보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교전지역을 직접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웃국가에서 한국교포들을 상대로 취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국내에서 스트레이트와 해설 등 기사의 상당부분은 외신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고 파견된 기자들은 현장감 있는 스케치 등을 덧붙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송국의 경우에는 이라크 전쟁 때에 이집트 카이로 등지에서 취재하고 카이로 현지에서 생중계하곤 했습니다. 그나마 파견된 기자들도 전쟁이 발발하고 2-3주쯤 지나 국민들의 관심이 시들하면 곧 바로 철수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보니 전쟁취재에 대한 규칙이나 매뉴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위기상황의 언론

국가가 위기상황에 있다면 언론은 진실과 국익 사이에서 고뇌해야 합니다. 서해교전이나 천안함 사건 같은 긴장감 높은 상황이라면 언론의 고뇌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국익을 생각한다고 해서 국익이라는 이름아래, 언론은 군의 보도자료만을 받아쓰는 선전기의 역할만 할 수 없습니다. 또 진실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고 언론이 취재한 모든 것을 보도했을 때에는 자칫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움에 처하는 더 큰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국익을 위해 보도통제를 감내해야 하고,

때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군의 요청도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진실과 국익 사이 그 중간지대,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군은 속성상 많은 정보를 통제하려 할 것이고 또 언론은 이를 헤치고 더 많은 정보를 보도하려 하기에 갈등은 필연일 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기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고, 보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어느 정도의 합의와 시나리오, 보도준칙 등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전에 평화 시에 미리 준칙 등을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보도준칙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군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의 정확성과 국익보호,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언론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또 정확한 보도를 위해 미리 언론인들에게 군 시설과 군의 업무현황에 대해 백그라운드 브리핑 등을 통해 언론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시대의 위기보도

지난 2000년 이후 언론인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등을 포함하여 기자가 2만 명이 넘는다는 발표가 있을 정도입니다. 언론인의 증가는 정보의 다양성을 위해서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국가의 위기상황에서는 자칫 언론인들이 취재과정에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군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보도를 통제하기 힘들어지고, 잘못된 정보는 물론 원치 않는 보안내용이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준전쟁 상황이 발발했을 경우, 상상 이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 대변인실 등을 중심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정보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수십 명 또 수백 명의 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커다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자들을 포함한 풀(Pool)단을 미리 구성해놓아야 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 취재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미리 평화 시에 설명하고 그들의 협조약속도 받아놓아야 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할 때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풀기자를 구성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취재할 수 있을 때에는 구태여 비용과 인력을 들여 자사 기자를 현장에 파견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풀단에 참여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평소에 사전 안보교육, 위기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어디까지 군사기밀이고 보호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상세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서둘러 풀을 구성하고, 기자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풀을 먼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만들어진 매뉴얼에 따라 그 풀을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전에 안보 및 안전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기상황 발생 시에 취재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언론사 역시 국가안보 사항을 그냥 화재나 재난 발생 사건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맺는 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재앙은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First casualty is the truth).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위기상황에 어느 정도의 진실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지나친 통제는 유언비어를 확산시켜,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군은 상당히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아마 모든 정보는 통제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처럼 본토와 떨어져서 전쟁을 벌인다면 군은 알리고 싶은 것만 알려도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위기발생지역에도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실을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유언비어는 더욱 늘어나고 부정확한 보도도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군에서도 무조건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진실은 언론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군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수위를 판단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신뢰가 형성됩니다. 기자들이 군

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어떠한 논의도 무의미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회로 군이 먼저 신뢰를 위한 손을 내밀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언론사 역시 위기 발생 시 어떻게 보도할 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모든 회사들이 국방전문기자를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젊은 기자를 화재현장에 보내듯, 긴장발생 현장에 보내어 단발적인 팩트만을 챙기면서 국가 보안사항을 노출시키는 경쟁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위기 발생 시에는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민하면서, 기사량과 기사의 톤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